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95

2025.05

건축·도시 AURI POLICY UPDATES

2025년도 건축·도시 분야
중앙부처 업무계획



건축도시정책동향 Vol. 95

발 행 : 건축공간연구원(auri)
발행인 : 박 환 용
발행일 : 2025년 4월 30일
I S S N : 2635-5140
기 획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주 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연락처 : 044-417-9694
이 메 일 : jlkim@aur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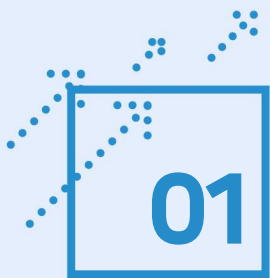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01 ● 건축·도시 분야 10대 주요 정책테마

02 ● 중앙부처 주요 업무계획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건축·도시 분야

10대 주요 정책테마

건축·도시공간과 연관성이 높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의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토대로, 10대 주요 정책테마를 도출하여 요약·정리하였습니다.



테마1

공간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지원 강화 거주 외국인 특성·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구축 추진 • 치유공간 조성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를 통한 치유서비스 제공 및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특화 체육 진흥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운동의 생활화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생·고령화 대비 국민체육 진흥시설 신규모델 개발을 추진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2차병원 환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병원 집중 육성 • 전국 확산 통합돌봄 지원체계 전국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 지역 및 대상 확대 • 주거복지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 마련 및 평가제도 도입, 공급 부족지역 중심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 검토 • 지역격차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 분석을 실시, 지역 간 서비스 편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확충 방안 마련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취약계층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및 취약계층 주거가구 실내환경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학교 운영 안정화 아동친화적 교실 및 교사연구실 확충, 거점형 놀이 등 학교 밖 공간 활용 모델 확산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 마련

테마2

스마트 환경 구축과 규제 혁신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M 상용화 모델 다각화 수도권 도심 실증을 본격화 추진하고, 교통·관광·응급 의료 등 상용화 모델을 다각화하여 2개 지자체 대상 사업준비 지원 • 스마트시티 선정 기존 도시에 재정 지원, 규제 특례, 기술 실증 등 집중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1개소 선정

[건축·도시 분야 10대 주요 정책테마]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건설기술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활용 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BIM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확대 • 규제 사전진단 시범 운영 공장 인허가 시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으로 토지, 건축, 환경 등 각종 규제를 사전 검토하는 사전진단 서비스 시범 운영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계약규제 개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계약 특례연장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방안 발굴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규제 완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농업(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등) 확산을 위한 농지·산단·개발제한구역 등 입지 관련 규제 완화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혁신 상시화 투자와 산업혁신을 얹매는 현장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강화

테마3

보행안전과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강화 안전사고 예방적 대응을 위해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설계), 추락 사고 방지 대책 마련(시공), 국가인증 감리 선발(감리) 등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제고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동기 강력범죄 대응체계 정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 등 공중안전 위해사범 처벌근거 신설, 강력범죄 전담검사 중심으로 경찰 수사공조 체계 강화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안전 보행 앱 시범운영으로 어린이 보행 안전습관 형성 지원 • 놀이시설 관리 신종·유사 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어린이 놀이시설법」 반영)

건축·도시 분야 10대 주요 정책테마

테마4

주거유형 다각화 및 정주환경 개선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 신속 공급 '25년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호를 신속 공급 • 신축매입임대 공급 신축매입임대 11만호 공급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 인센티브 부여 및 입주자 모집을 착공 후 3개월로 조정하여 공급속도 제고 • 민간사업 지원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25.上)를 통해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고, 건설사 선분양 기간 제한 등 규제 완화 • 공사비 제도개선 종심제 낙찰률 상향, 물가 반영기준 조정, 일반관리비 상향 등 공사비 적정 단가 및 물가 반영기준 등 제도개선 • 재건축진단 요건 개선 주민 거주 불편사항 추가 등 재건축 진단 규제 개선 • 재개발 요건 완화 무허가건물 포함 등 규제 개선 및 노후 주택개량 촉진을 위한 리모델링 제도 개선 • 노후계획도시 정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을 본격화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 • 고령자주택 공급 고령자 맞춤 시설·서비스를 갖춘 실버스테이(민간임대) 1.5천호를 공모하고, 고령자복지주택(공공임대) 3천호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및 노후 공공임대(158개 단지)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금 완화 결합건축제도 적용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입법 등 착공·주택공급 등을 제약하는 각종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합동 사업 PF 조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해소 등 사업 정상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 정비 활성화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마련('25.3.) 및 빈집 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체계적 현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피해자 지원 임시조립주택 수급관리 체계화, 다양한 임시주거시설 제공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테마5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대적 변화 선도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단위 스마트농업 성장을 위해 스마트농업 및 전후방산업 관련 기업과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 대응 해수면 상승, 침식 등에 대응하는 통합 재해관리 체계 구축 첨단 해양교통 플랫폼 선박위치정보 등 공공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첨단 해양교통 플랫폼 구축
국가유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기술 적용 확대 IoT 기술을 접목한 건축유산 상시모니터링 강화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식물·자연경관 조사에 방재드론 활용 확대 디지털 복원·콘텐츠 제작 멸실된 주요 건축물에 대한 디지털 복원(AR재현 등)을 추진하고, 실감콘텐츠 제작·보급으로 새로운 관람 및 체험서비스를 제공

테마6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ZEB 인증등급 상향 공공건축물 ZEB(Zero Energy Building) 최저 인증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하고, 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 관련 설계기준을 강화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프라 홍수·가뭄에 대응한 예보·수자원 관리체계 구축, 도로·철도·하천 등 인프라 설계기준 강화, 방재시설 기준 정비 생활공간 생활공간 주변 대기질 취약지역 내 배출사업장 전주기 종합관리 추진 감축목표 실현가능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마련 이행기반 광역 시·도 뿐 아니라 기초지자체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기본계획 수립·이행 지역거점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거점 인프라 집중 육성 흡수원 습지 훼손지 복원, 유희부지 흡수원 확대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해양수산부	• 항만 탄소제로 항만 내 친환경연료 저장시설 확충 및 공급기반 구축
	• 재해 대응 해수면 상승, 침식 등에 대응하는 통합 재해관리 체계 구축
국가유산청	• 재난·안전관리 법령 제정 문화·자연·등록유산을 포함하는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새로운 국가유산 재난안전 정책 마련
	• 기후변화 대응 연구 국가유산 피해회복 기술개발 및 국가유산 적응관리 기술개발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테마7

인구감소와 지방 중소도시의 활성화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국토교통부	• 지역활력타운 대상지 확대 지역활력타운 대상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에서 7개 도 120개 지자체로 늘리고, 부처 연계사업을 확장하여 '25년 10곳을 선정
	• 성장거점 조성 철도지하화·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도시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연계하여 공간혁신구역 추가 발굴
	• 기존거점 조성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의 조성을 위한 통합설계 국제 공모 시행
행정안전부	• 지방소멸대응기금 내실화 성과 중심의 기금 배분·운용, 다년도 사업 안정적 추진 및 집행률 제고, 지역 특화사업과의 연계 강화
	• 생활인구 활용 확대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를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 맞춤형 정책 수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시설 지역 건립 지역 수요를 반영해 법인 형태의 권역별 국립미술관 설립 등 새로운모델 도입 추진
	• 공립문화시설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지방 이양으로 지역 자율성 제고
	• 공간재생 폐교·폐교도소 등 유휴시설 문화공간재생 사업 추진

[건축·도시 분야 10대 주요 정책테마]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지향 지역거점 연구기능 확충(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 및 희귀·소아질환, 난임 등 필수의료·질환중심 연구강화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자원 활용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교원과 학교시설을 재배치하여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 등 기존 학교의 효과적 활용 모색 • 학교복합시설 설치 학생 교육과 정주여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사업 지속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상권 지원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상권 리모델링 등 ‘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을 신설

테마8

건축자산 등 국가유산 가치발굴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국가유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정 추진 「국가유산기본법」 제27조의 구체적·체계적 정책 마련 위한 「국가유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등록 확대 보존가치가 높은 유산에 대한 지정·등록을 확대하고, 신규 분야 발굴을 통해 균형 있는 지정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형자료 구축 건조물 정밀실측, (불교)동산유산 정밀조사 등을 통해 기록함으로써 문화유산의 수리·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권정비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문화권정비법」에 근거하여, 2차년도 역사문화권정비 선도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평가 운영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평가항목·검토기준 및 세계유산지구 지정 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지원 체계 마련 사적·명승 등을 중심으로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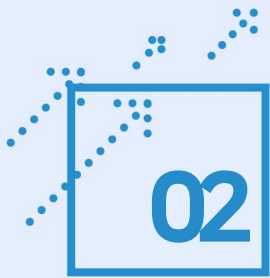
테마9

지역 가치발굴을 위한 공간 단위 관리체계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관리 강화 공유재산 총조사로 숨은재산 확인 및 재정 누수 방지, 유휴재산 주민 공개 및 이용 활성화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항 테스트베드 착공 스마트항만 국산기술 확보를 위한 광양항 테스트베드를 착공하고, 축적된 기술·경험을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가공단지 조성 고부가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영세수산물 가공시설·업체 집적화·규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관광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으로 종합적 해양레저관광 정책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저 글로벌 해양관광 명소 조성, 새로운 레저·관광 콘텐츠로 내수활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 육성 해양플랜트·신소재 등 연안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풍력 입지 해상풍력 입지정보 구축, 적합입지 마련 및 어업인 의견수렴 강화 등 계획입지 도입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국가유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관할구역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진단제도 시행 도시계획 등이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규제 절차를 일원화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2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관리 내실화 유네스코 정기보고와 「세계유산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연계하고, 지역민이 참여하는 홍보·활용 사업을 추진

농산어촌 지역 특성화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관광 촉진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및 농어촌 민박 운영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기업·청년 지원 인구감소지역 특산물 활용 협업체품 개발, 지역-기업 상생을 위한 협력모델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이용범위 확대 농지에 복잡한 전용 절차 없이 농업생산 관련 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자체(139개 시군) 여건에 따라 농촌을 산업·주거·사회서비스 맞춤형 공간으로 재편하는 공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통합지원 농촌협약 연계하여 사업 단위가 아닌 지자체별 통합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방식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 활용 창업공간 등 조성을 위한 빈집 재생 지역을 확대하고, 「농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 추진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 경제·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속 추진 및 신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 민간투자 확대 어촌 민간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제도기반 구축 및 규제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귀어인 지원 청년·귀어인 등 대상 일자리, 주거·생활서비스 패키지 지원



건축·도시 분야

중앙부처 주요 업무계획

아래의 중앙부처 업무계획 중 건축·도시 관련 세부계획 중심으로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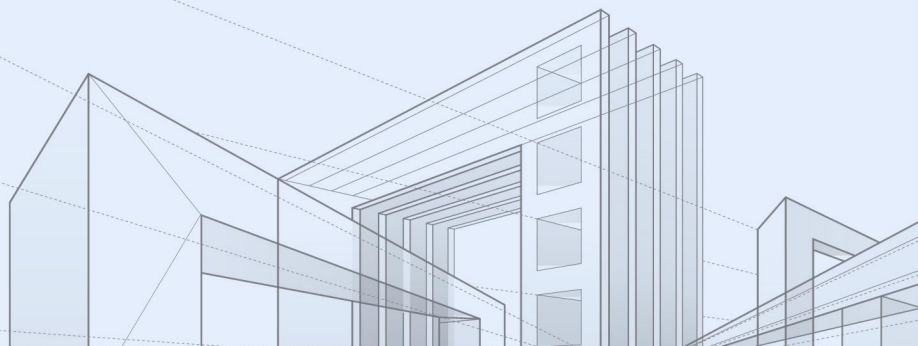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업무추진 방향

목표

국민 안전, 민생 안전, 경제 회복, 혁신 성장

- 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② 서민 주거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 ③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 ④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⑤ 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주요 성과

-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등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 확충
- 신규 국가산단 발표, 도심융합특구법 제정('23.10) 등 성장거점 기반 조성
- 민관합동을 통한 해외건설시장 개척으로 3년 연속 수출실적 증가
- 모빌리티혁신법, UAM법 제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전국 확대 등 미래형식 기반 마련('23)

보완
사항

- 건설업계 폐업 증가, 건설 취업자 감소 우려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 지속 필요
- 균형발전 정책 지속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지방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양상

대내외 정책여건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 안전, 주거 안정, 교통편의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 교통·항공, 시설물 등 일상생활에 대한 안전 위협으로 국민 불안 증가 주거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경기회복 지연 등 공급여건 악화 시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 교통 수도권-지방 간 교통 격차 해소 및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이동권 보장, 질 좋은 교통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

구분	내용
• 안정적 경제 성장과 함께 균형발전 등 국가적 과제 대응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지속 영향으로 내수 회복 지연 및 글로벌 금리인하 속도 조절 등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 • 사회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 가속화, 반면 수도권은 과도한 집중에 따른 경쟁압력 증가로 집적불경제 발생 • 기술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국토교통 산업 전반의 혁신도 요구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 강화)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국토교통 수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강화 인천검단 사고 등에 따른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하여 구조전문가 확충 - (시공)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방지 대책 마련 - (감리) 국가인증 감리 선발 전문성 제고 및 감리 육성을 위해 400명 선발 계획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량 감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EB 인증등급 상향 공공건축물 ZEB(Zero Energy Building) 최저 인증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하고, 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 관련 설계기준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EB 대상 : (공공) 연면적 1천㎡ 이상, 17개 용도, (민간) 연면적 1천㎡ 이상 ※ ZEB (Zero Energy Building) : 에너지 소비 최소화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녹색건축물

■ 서민 주거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 및 안정적 시장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매입임대 공급 신축매입임대 11만호 공급('2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 착공 인센티브 및 입주자 모집을 착공 후 3개월로 공급속도 제고 • 민간사업 지원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25.上)를 통해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고, 건설사 선분양 기간 제한 등 규제 완화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 신속 공급 '25년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호 신속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형 주택 당초 계획보다 인허가 물량을 확대 추진하고, 특히 인허가·착공 계획 물량의 20%를 상반기 조기 완료 - 착공 전년도 대비 2만호 이상 늘어난 7.4만호 목표, - (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 등 16.6만호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용인이동, 구리토평 등 7.1만호 지구지정 • 공사비 제도개선 종심제 낙찰률 상향, 물가 반영기준 조정, 일반관리비 상향 등 공사비 적정 단가 및 물가 반영기준 등 제도개선('25.1Q) • 재건축진단 요건 개선 주민 거주 불편사항 추가 등 재건축 진단 규제 개선('25.上) • 재개발 요건 완화 무허가건물 포함 등 규제 개선 및 노후 주택개량 촉진을 위한 리모델링 제도 개선 추진('25.上) • 노후계획도시 정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을 본격화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25.下)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희망의 주거사다리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대출지원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25.上) • 청년주택 공급 국공유지·노후청사 활용 건설임대 2천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6만호 등 우수 입지에 편의시설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 • 지방공사 택지 활용 청년층·신혼부부 주택공급을 위한 지역제안형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도입 • 고령자주택 공급 고령자 맞춤 시설·서비스를 갖춘 실버스테이(민간임대) 1.5천호를 공모하고, 고령자복지주택(공공임대) 3천호 공급 •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개정('24.9)에 따라 7.5천호 규모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최장 10년 무상 거주 지원을 본격화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8대 경제·생활권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8대 경제·생활권 육성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8대 경제·생활권: 5개 초광역권(수도권+4대 초광역권), 1개 광역권(전북), 2개 특별권(강원, 제주) 성장거점 조성 철도지하화·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도시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연계하여 공간혁신구역 추가 발굴('25.下) 도심융합-기회발전특구 연계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도심융합특구를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하여, 기업 투자환경 조성,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등 종합발전계획을 수립('25.下) 기존거점 조성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 조성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 시행('25.上)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단위 철도지하화 지자체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1차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접수를 통해 전국 단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25.12) 뉴·빌리지 사업 확대 뉴·빌리지 선도사업 2차년도 사업 추진, 빈집은행, 빈집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도입 등 빈 집 정비를 위한 사업 추진('25.上) 지역활력타운 대상지 확대 지역활력타운 대상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에서 7개 도 120개 지자체로 늘리고, 부처 연계사업을 확장하여 '25년 10곳을 선정

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미래 新산업·新기술 육성)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미래를 선도해 나갈 新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UAM 상용화 모델 다각화 수도권 도심 실증을 본격화 추진하고, 교통·관광·응급 의료 등 상용화 모델을 다각화하여 2개 지자체 대상 사업준비를 지원('25.下) 스마트시티 선정 기존 도심에 재정 지원, 규제 특례, 기술 실증 등 집중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1개소 선정('25.上)
주요 산업 체질 개선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건설기술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활용 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BIM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확대('25.下) 규제 사전진단 시범 운영 공장 인허가 시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으로 토지, 건축, 환경 등 각종 규제를 사전 검토하는 사전진단 서비스 시범 운영('25.2)

업무추진 방향
목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

- ① 민생경제 회복
- ② 대외신인도 관리
- ③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 ④ 산업경쟁력 강화

대내외 정책여건

구분	내용
경기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 세계경제는 주요국 통화긴축 완화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전환이 중요 변수로 작용 • 대내 고물가·고금리 등 제약요인 완화로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수출은 124년보다 증가폭 둔화 전망
금융·외환시장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시장 美통상정책 전환, 주요국 금리경로, 지정학적 긴장 등 전개양상에 따라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
민생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 누적된 고물가 영향에 따른 생계비 부담 지속 • 고용 취업자 증가폭 축소로 고용 여건 어려움 예상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민생경제 회복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내수 등 경기회복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관광 촉진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및 농어촌 민박 운영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 (농어촌 민박 운영요건 완화방안) 면적 제한 폐지, 식사제공 허용 등 • 관광인프라 확충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본격 시행 및 복합시설지구 유형 신설(상반기) 등 맞춤형 관광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 • 공공주택 공급 '25년 중 뉴:홈 10만호 공급,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8만호 착공 계획 •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및 노후 공공임대(158개 단지)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 수립('25.上)

[주요 업무계획 기획재정부]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주택 공급 3만호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계획('25.上), 3기 신도시는 '25년 중 1.2만호 착공하고 0.8만호 분양 추진 • 공공 공사비 현실화 공사비 상승분을 고려하여, 공공계약·총사업비관리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 추진 • 부담금 완화 결합건축제도 적용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입법 등 착공·주택공급 등을 제약하는 각종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합건축제도) 용적률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적용요건 완화 검토 - (입법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입법 지속 • 민관합동 사업 PF 조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해소 등 사업 정상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 공실 등을 다양한 용도(주거, 업무, 문화시설 등)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탄력적 용도전환 지원방안 검토 • 산단여건 개선 타 기업 직원도 사용 가능하도록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하여 산단 근로여건 개선 추진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창업공간 지원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을 지속 추진하고, 매입한 반지하 주택을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 공간 등으로 적극 활용 • 도심거주 지원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청년임대 2천호 이상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들이 도심 내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심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한 기숙사 설치 활성화 추진

■ 산업경쟁력 강화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핵심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확충 태양광·해상풍력 등 보급 시 공공역할 확대, 비용저감, 공급망·안보 강화 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방안 마련('25.1Q) • 국제탄소시장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과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 개발 추진
기업 투자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혁신 상시화 투자와 산업혁신을 얻매는 현장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8개 분야(산업융합, ICT,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로 확대 ※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규제개선 효과 큰 사업을 선제적 기획, 과제발굴하는 Top-down 방식

핵심 추진과제

- ①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
- ②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 ③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 ④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동기 강력범죄 대응체계 정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 등 공중안전 위해사범 처벌근거 신설, 강력범죄 전담검사 중심으로 경찰 수사공조 체계 강화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사기 엄단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법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지속 • 민관협업 현장 중심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관련 기관 복지위기 알림 앱 이용 확대 ※ 건강보험공단, 한전 MCS 등 상담창구 운영, 주민 생활 밀접 기관 등

■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인권친화적 교정시설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정시설 공간 확충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신축 이전(원주), 수용동 증축(울산, 진주, 군산, 순천, 논산)을 통한 수용 환경 개선

업무추진 방향

목표

- ① 안정적 국정 운영 지원 및 평온하고 안전한 국민 일상 확보를 위해 기관 전체의 역량 집중
- ② 주요 기능 및 기 수립한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력 제고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정부, 사회통합

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주요 성과

-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현장 대응능력 향상
-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체계 정립, 미래 대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본격화
- 정부 운영(조직·정원)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한 국민 편의성 증진

보완 사항

- 국민 보호기능 유지·강화
- 지역경제 안정화 도모,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화 대책 지속 발굴·지원 필요
- 공공부문의 AI 적극 접목·활용으로 '인공지능정부' 시대 구현,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대내외 정책여건

구분	내용
• 이상기후 일상화 및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위험 상존	• 시기별 자연재난 및 신종·복합·고위험재난 대응태세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국민 보호기능 유지·강화 필요
• 경제성장 둔화 예상, 누적된 고물가 영향 등으로 경기전망 악화	•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저출생·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 • 상반기를 중심으로 가용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지역경제 안정화 도모,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화 대책 지속 발굴·지원 필요
•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중요	• 공공부문의 AI 적극 접목·활용으로 '인공지능정부' 시대 구현,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으로 디지털정부 1위 국가로서의 위상 공고화 필요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 국민안전: 어디서나,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는 국민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겨울철~여름철 재난 인명피해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설·한파·화재 대응 제설 인프라 확충 및 5대 대설 피해 집중점검(11,312개소), 화재 취약시설(요양병원, 숙박시설, 영화관 등) 안전관리 강화 • 취약시설 점검 해빙기 붕괴·전도·낙석 등 취약 시설 집중점검 및 응급조치 • 풍수해 대응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대비 중심으로 피해 저감시설 확충
안전약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안전 ‘아이먼저 캠페인’(24-)을 전 분야로 확장, 안전체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 앱(25.5. 시범운영)으로 안전습관 형성 지원, 신종·유사 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어린이놀이시설법」 반영) • 재난피해자 지원 임시조립주택 수급관리 체계화, 다양한 임시주거시설 제공

■ 지방시대: 위기를 극복하고, 골고루 발전하는 지방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계약·규제 개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계약 특례연장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방안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보증금 인하,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 기간 단축, 민생 관련 지방규제 중점 정비
소멸 위기 극복 시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멸대응기금 내실화 성과 중심의 기금 배분·운용, 다년도 사업 안정적 추진 및 집행을 제고, 지역 특화사업과의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투입 효과·성과 중심으로 배분, 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기금관리조합의 실시간 집행 모니터링 강화 • 빈집 정비 활성화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마련(‘25.3) 및 빈집 정보 플랫폼 구축(‘25.上)으로 체계적 현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거 자원사업 확대 및 추가 세제지원 발굴·협약, 철거 후 공공활용 조건 완화 • 지역기업·청년 지원 인구감소지역 특산물 활용 협업체품 개발, 지역-기업 상생을 위한 협력모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활력펀드’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투자 및 이전기업 유치 지원(‘25.上) - 청년마을 조성 확대, 청년 주도 로컬 비즈니스공간 조성 추진

[주요 업무계획]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지역 지원 서해5도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노후주택개량비 지속 지원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관리 강화 공유재산 총조사로 숨은재산 확인 및 재정 누수 방지, 유휴재산 주민 공개 및 이용 활성화 • 지방공공기관 효율화 통폐합·기능조정 등 구조개혁 지속 추진, 출자출연기관 타당성 검토 강화 및 사업별 예산제 도입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미래 발전 토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인구 활용 확대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를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 맞춤형 정책 수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인구 통계항목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지역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 분석·제공

■ 사회통합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따뜻한 공동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지원 강화 거주 외국인 특성·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구축 추진
발전적 과거사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공간 조성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를 통한 치유서비스 제공 및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25.上)

주요 업무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추진 방향
목표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

- 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문화·스포츠·관광 소비 확대**
- ② **문화로 이루는 지역균형 발전**
- ③ **성장과 수출을 견인하는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육성**
- ④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문화**
- ⑤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우리 문화**

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주요 성과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전통문화산업 등 진흥 기본계획 수립('24)
- 청와대 복합문화공간화('22), 아트코리아랩·모두예술극장·모두미술공간 등 개관

보완 사항

- 문화·체육·관광 분야 향유수준 회복 및 지방분권에 대응한 향유 여건 개선 필요

대내외 정책여건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불확실성, 변동성 증대로, 관광·콘텐츠 리스크관리 총력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 상승, 경기침체 속 여행·여가·문화 등 관련 소비 감소가 예상되며, 방한 신규 여행 수요 감소 등 '25년 상반기까지 부정적 영향 전망 • 콘텐츠 업계는 타 산업과 달리 수출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생·초고령화, 지역소멸 등 사회경제적 도전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생·초고령화 사회 진입,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복지 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도전 직면 • 지역·소득·연령별 문화향유 격차 지속, 특히, 대도시-읍면 격차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호감 고조에 따라 글로벌 문화중 추구가 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팝, 드라마, 게임뿐만 아니라 한국문화 전반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 • 광복 80년, 한일국교정상화 60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등 국민 통합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활용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 대전환(AI) 가속화, 미래 주도할 정책적 대응 강화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성형 AI 급격한 발전, AI 시장 성장, 일상화 등으로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 콘텐츠·문화 등 산업 전반 체질 변화와 혁신 요구 청년, 장애예술인 등의 도전과 경험을 지원하고, 산업 생태계와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개선 필요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 문화로 이루는 지역균형 발전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권역별 문화시설 거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 지역 건립 지역 수요를 반영해 법인 형태의 권역별 국립미술관 설립 등 신운영모델 도입 추진 • 공립문화시설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지방 이양으로 지역 자율성 제고 • 공간재생 폐교·폐교도소 등 유희시설 문화공간재생 사업 추진
문화로 발전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자산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 도록 ‘대한민국 문화도시’, ‘로컬100’ 등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부터 광역형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본격 추진

■ 성장과 수출을 견인하는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육성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K-콘텐츠산업 핵심 성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K-콘텐츠 메가 프로젝트 K-콘텐츠 재도약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K-콘텐츠 향후 30년을 이끌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여, 콘텐츠 제작·생산·소비 허브를 구축 (글로벌 영상도시 조성) 국립영상박물관, 부산 영상촬영소 구축,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확대 등 부산을 세계적인 영상중심도시로 육성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아카이브, 복합문화공간 등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설립을 통해 대중문화 대표 랜드마크 조성

[주요 업무계획]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수출&재도약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관광 기반 확충 내국인 도시민박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관광진흥법상 외국인만 가능한 도시민박을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도록 법령 개정 -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한 혜택 제공 • 지역 교통망 확대 KTX·버스 터미널 등 지역의 주요 교통거점과 관광지를 잇는 초광역형 관광교통망을 구축하고, 인구감소지역 특화 신규교통망 확충을 계획
-----------------------	--

■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문화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문화로 여는 포용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특화 체육 진흥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운동의 생활화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생·고령화 대비 국민체육 진흥시설 신규모델 개발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어린이집·유치원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신체활동과 유아 특화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조성('25년 9개소) - (시니어) 탁구, 요가 등 시니어 친화 종목과 건강측정실 등을 반영한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확충('25년 20개소) • 학교 연계 프로그램 놀봄학교 등과 연계한 예술·체육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장애인 접근성 제고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인 스포츠클럽·동호회 등 운영을 확대

업무추진 방향

목표

- ① 농업·농촌은 민생에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농업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농식품 수급 안정 등 민생 안정 과제를 최우선에 두고 위기 극복에 전력
- ② 동시에, 농업·농촌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원 재분배 및 투자 병행
- ③ 농식품 분야 5대 민생 안정 패키지 집중 지원
- ④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 추진
- 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 추진
- ⑥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

대내외 정책여건

구분	내용
• 디지털·AI 등 기술 발전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AI 등 혁신 기술을 농식품 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 형성 • 스마트농업, 푸드테크·외식 등 새로운 산업 분야 성장
• 국민 관심·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민·청년 등의 농촌 생활·창업에 대한 관심·수요 증가 • 반려동물·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 추진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농촌 발전과 농산업 성장을 위한 농지제도 를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이용범위 확대 농지에 복잡한 전용 절차 없이 농업생산 관련 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농장, 주차장·화장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농지의 이용범위를 확대 • 농지 활용 다양화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을 통해 농업의 범위를 유통·가공업·기타 등 농산업으로 확장함으로써 농지 다목적 활용 추진('25.上)

[주요 업무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자체(139개 시군) 여건에 따라 농촌을 산업·주거·사회서비스 맞춤형 공간으로 재편하는 공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공간계획 수립을 토대로 농·산지 등 입지규제 완화 및 재정·펀드 투자를 지원 • 농촌 맞춤형 특구제도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입지규제 특례 범위 설정 등 특구제도 세부 도입방안 및 근거법률 마련 • 지자체 통합지원 농촌협약 연계하여 사업 단위가 아닌 지자체별 통합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방식을 개편('25.上) • 新농촌 활력 제고 프로젝트 새로 재편된 농촌 공간에 테마·치유관광, 워크ेशन 등 특화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에 장기체류하면서 여가·관광을 즐길 수 있는 지자체 주도형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3개소 시범 조성('25.下) • 빈집 활용 창업공간 등 조성을 위한 빈집 재생 지역을 확대하고, 「농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下) '빈집은행 플랫폼' 구축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 추진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스마트농업 지역 단위 확산 및 첨단기술 연계를 통한 외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단위 스마트농업 성장을 위해 스마트농업 및 전후방산업 관련 기업과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 입지규제 완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농업(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등) 확산을 위한 농지·산단·개발제한구역 등 입지 관련 규제 완화

■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동물복지 인프라 확대 및 연관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 인프라 확충 동물등록제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보호시설, 인력 등 반려동물 보호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편의시설과 연계한 지자체 보호센터 확대('25년 102개 계획) • 동물복지 제도 안착 농업기질평가장, 훈련소 등 맹견 사육허가제 안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25.3)

업무추진 방향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
목표	① 약자복지 강화 ② 의료개혁 성과 창출 ③ 지속가능성 확보

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 최우선 보호 •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과제 수립 및 당면 개혁과제 중심으로 1차 실행방안 발표 • 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출산·양육지원 투자 강화로 합계출산율 반등 및 연금개혁 추진 	보완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 낮음 • 약자복지는 더욱 두텁게 강화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체감도 향상
-------	--	-------	--

대내외 정책여건

구분	내용
가계경제 인플레이션·고금리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분배는 개선 추세이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높고 자산 격차가 심화 • 수요 대비 이용 가능 복지서비스 부족, 고독사 등 새로운 복지수요 등장
의료환경 필수의료 위기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력 부족 및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 심화 •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 확대 및 자살사망률 증가 등 정신건강 악화
인구구조 초저출산·초고령사회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으나, '24년 합계출산율은 소폭 상승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향후 복지지출이 급증할 전망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응급 의료체계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마련 등 비상·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여 중증·응급진료 차질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23개소), 진료협력병원 운영을 통한 전원·회송 지원 등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필수의료 제공	지역완결 의료전달 체계 확립 및 생태계 회복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2차병원 환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병원 집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괄성·진료역량 갖춘 지역 종합병원 집중지원, 화상·뇌혈관 등 필수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 지원 강화 거점기능 강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 필수의료 중추역할 확립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운영비·시설·장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국립대병원 연구 인프라 확충 등 기반 마련 국립대병원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 관리체계 복지부 이관 및 책임의료기관 발전방안 마련
	필수·공공의료 적시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의료 최종치료 역량을 고려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증질환·치료 등 최종 치료 제공 역량을 포함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개선 심뇌혈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 및 권역 심뇌센터 기능 고도화를 통한 지역완결적 심뇌혈관 최종치료 제공 모자의료 지역 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 산모·신생아 중증도별 진료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최상위-일반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중증 모자의료센터) 최종중 산모·신생아 분만 및 치료 제공 ※ (권역모자의료센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대·개편 정신건강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제도 도입, 권역정신응급센터(14개소) 및 공공병상 확대(130병상) 등 대응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43개소, 1,134개 병상)의 본사업 전환

■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통합돌봄 지원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확산 통합돌봄 지원체계 전국 시행('26) 준비를 위해, 시범사업 지역 및 대상 확대(47개 시군구, 노인+재가장애인) • 서비스 확충 임종기 케어 등을 위한 재가 생애말기케어 모형 및 퇴원환자의 일상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퇴원 후 시군구 지역돌봄 및 재가의료와의 연계체계 강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 중증(1·2등급) 수급자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한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 확충(20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 장기요양 어르신 의료-요양 연계 강화를 위해 재택의료센터 확대 및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기준 완화 • 주거복지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 마련 및 평가제도 도입, 공급 부족지역 중심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 검토
장애인 돌봄 강화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일상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대상 확대(13.3만명), 중증장애인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가산급여시간 인상(205시간) • 발달장애 최중증 긴급돌봄센터 운영 및 주간·방과후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서 도전적 행동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신설(2개소) - 의미 있는 낮 활동 지원을 위해 주간·방과후서비스대상 확대(2.3만명) 및 연령 기준 완화(18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건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집중시설 의료인력·장비를 추가 배치하여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시설 간호사 추가 배치, 의료장비 보강, 24시간 의료지원 • 발달장애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기준 완화(9세 미만) 및 대상 확대(10.4만명),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20개소) • 장애친화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검진기관 운영 확대(42개소), 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25.下) 및 한의 주치의 도입 검토
신돌봄수요 대응	돌봄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격차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25.上), 지역 간 서비스 편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확충 방안 마련('25.下)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출산율 반등을 위한 출산·양육 부담 경감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상담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 겪는 부부 등의 심리·정서 지원 강화를 위해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확대(중앙 1개소/권역 11개소)
	의료비 등 양육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초기 건강관리 임신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대상 건강영아발달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78개 시군구)• 돌봄 노인일자리를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초등돌봄 제공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1,372개소)
바이오헬스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보건의료 R&D 혁신 및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해결지향 지역거점 연구기능 확충(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 및 희귀·소아질환, 난임 등 필수의료·질환중심 연구강화

업무추진 방향

- ①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 ②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
- ③ 전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

대내외 정책여건

구분	내용
• 폭염, 이상기후가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를 위협	• 2024년 역대 최고 수준 폭염·폭우 기록, 지역·계절간 강수편차 심화 • 이상기후로 농산물 재배적지 변화 및 생육 저하, 어획량 감소
•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 국민 요구 증대	• 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감소 등 저탄소 사회 전환 진행 중이나, 감축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 지속
• 글로벌 탄소무역규제 본격화	• EU 탄소무역규제(CBAM, 기후공시, RE100, 에코디자인 등) 본격화 등 국제 탄소규제 지속 강화 전망
• 글로벌 녹색시장 규모 팽창	• 전 세계 녹색경제 규모는 7.2조 달러('24.1Q)에 이른 것으로 추정 • 각국이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녹색경제도 지속 성장 전망
• 환경복지, 환경 서비스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	• 초미세먼지 개선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저조, 악취 등 일상생활 환경불편 개선 요구 증대 • 생활화학제품 소비 증가, 온라인 구매 확대 등으로 제품 내 유해물질 안전성에 대한 국민관심 증대 • 국립공원 탐방, 캠핑 등 친환경여가와 생태계 체험 등 자연혜택 이용에 대한 수요 확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범부처 기후적응 대책의 원년	• 인프라 극단적 홍수·가뭄에 대응한 예보·수자원 관리체계 구축, 도로·철도·하천 등 인프라 설계기준 강화, 방재시설 기준 정비

[주요 업무계획] 환경부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 야외노동자 근무지 등 주요 지점에 기후적응 인프라 집중설치 • 취약계층 지역별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 추진, 기후변화 취약계층 DB구축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26~'30)
안전하고 탄탄한 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홍수 대심도 빗물터널(광화문·강남역), 지하방수로(도림천) 착공, 하수시설 방어인프라 확충
매체별 환경오염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공간 생활공간 주변 대기질 취약지역 내 배출사업장 전주기 종합관리 추진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도전적 감축목표와 실현가능한 액션플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축목표 관계기관·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실현가능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논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25. 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기반 17개 광역 시·도에서 기초지자체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기본계획 수립·이행('25.4~), 정부는 이행관리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이행성과 반영, 노력도에 비례한 인센티브 운영 - 행정적 지원기반으로 지자체별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확대 - 미래환경편드를 통해 지역거점 녹색벤처기업에 집중 투자 • 지역거점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거점 인프라 집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 지역특화 녹색산업클러스터를 지역 기후테크 기업 연구·실증·상용화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특성화대학원 연계) -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실증, 지역 규제완화 특례 적극 지원 - 지역 환경시설 기반의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주민 수익 창출과 연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상생모델 발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차 충전소 연내 누적 450기 목표로 대형 상용차용 대용량 충전소 확충, 기존 도심지 CNG 충전소의 수소충전소 전환으로 충전 편의 개선

[주요 업무계획]

환경부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수원 습지 훼손지 복원(8개소), 유휴부지 흡수원 확대(국립공원)

■ 전국민이 혜택을 받는 환경복지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국민 일상을 지키는 환경 안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기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영역 중심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구조별 환기 가이드라인 보급 및 라돈저감 컨설팅, 지하역사 오염도·노후도 등을 고려한 환기설비 등 지원 체계 개선, 조리시설 배출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다량배출시설 설비 지원 • 민감·취약계층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및 취약계층 거주가구 실내환경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5천개소)
국토의 생태적 가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국립공원 111'(1 공원 + 1 탐방체류시설 + 1 테마)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으로 재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핑 초보자 이용이 용이한 야영장, 글램핑 단계적 확대, 탐방 약자도 국립공원 방문이 가능한 무장애 탐방로 설치 - 웨딩, 웰니스, 생태교육, 계절특화 등 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관광테마 개발 • 생태관광 생태관광 인증제 도입 및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고품질 생태관광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산품 브랜드 개발 및 지역특화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주민 자립경영 지원, 생태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환경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영향조사 공장 주변, 난개발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및 환경관리대책 수립 • 복원 + 경제활력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수립 본격화('25~), 융복합 복원모델 확산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
- -
 -
 -
 -

-
-
-

-

구분	내용
연안·어촌지역 지역소멸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은 농촌에 비해서도 빠르게 소멸 중이며 고령화율도 심각한 상황
침수 등 연안재해 피해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 대형 해양사고 급증, 특히 어선 전복·침몰사고 다수 발생 해수면상승, 해안침식 등으로 연안지역 재해 피해 빈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재해 피해액의 40.4%가 연안·항만 지역에서 발생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 글로벌 선도 해산물류 공급망 조성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디지털· 친환경, 미래형 물류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항 테스트베드 착공 스마트항만 국산기술 확보를 위한 광양항 테스트베드를 착공하고, 축적된 기술·경험을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항만장비 핵심부품 기술개발 착수, 항만 장비·시스템에 인공지능 접목, AI 항만 조성방안 마련 착수 - 항만 부지 내 데이터센터·UAM등 신산업 유치, 항만-신산업 시너지 창출 • 첨단 해양교통 플랫폼 선박위치정보 등 공공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첨단 해양교통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항밀집도 기반 주요 해상교통로, 교통환경정보 등 대국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탄소제로 항만 내 친환경연료 저장시설 확충 및 공급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선박연료 인프라펀드 1·2호 출범(울산 액체터미널, 여수 LNG 터미널)

■ 국민·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육성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국민 체감형 선진 유통·가공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인프라 소비자 접근성이 높고, 위생적인 선진 유통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본공사 착수('25.上) - 저온·친환경 설비를 갖춘 권역별 거점위판장 중심으로 유통구조 효율화(제주 한림, 통영 등) - 산지-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신선수산물 직매장 설치(30개소) • 스마트 가공단지 조성 고부가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영세수산물 가공시설·업체 집적화·규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가공 시설, R&D센터 등을 포괄하는 스마트가공단지 조성 착수 - 중기부와 협업하여 생산공정 스마트화, 5인 이하 소상공인 영세 수산물 가공업체 집적지구 지정 추진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인력 지원 청년·기업 등 신규인력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제도·인프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기업이 유히마을 어장을 활용하고 수익은 어촌계에 환원하는 제도 도입, 청년 대상 어선 및 양식장 임대료 수산업 진출 지원

활력있는 연안·살고싶은 어촌 조성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연안지역 활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관광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으로 종합적 해양레저관광 정책 기반 조성 • 레저 글로벌 해양관광 명소 조성, 새로운 레저·관광 콘텐츠로 내수활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해양관광거점 명소를 조성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착수('25.上) -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 7대 기항지별 테마관광상품 개발 - 국가해양생태공원, 등대·갯벌 등 해양자원 활용 이색 관광 신규 추진 • 항만 재개발 속도감 있는 항만 재개발 추진으로 원도심 경제성장 거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북항, 인천항내항 1·8부두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25.下) • 문화·교육 해양 문화·교육 확산으로 우리 바다에 대한 대국민 인식·저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 청주해양과학관 개관('25.下), 맞춤형 해양교육 프로그램 확대 	
연안경제 도약을 이끌 해양신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 육성 해양플랜트·신소재 등 연안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 개소(서천, '25), 기능성 원료화센터 조성 추진 중 	
정주·생활여건 개선으로 어촌·섬 소멸 대응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제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어촌 경제·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어촌신 활력증진사업 98개 사업 차질없이 추진, 신규 26개소 신속 선정 • 어촌 민간투자 확대 어촌 민간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제도기반 구축 및 규제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 배후 국·공유지 등에 민간투자 유치에 위한 어촌발전특구 신설('25) - 어항구역 내 식당·소형물 등 수익시설 입주 허용('25, 어촌어항법 개정) • 청년·귀어인 지원 청년·귀어인 등 대상 일자리, 주거·생활서비스 패키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 인근 유희부지에 청년·귀어 주택단지(개소당 30호)와 임대양식장 등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 바다마을 3개소 조성('25~) - 관계부처 협업으로 주택단지-생활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지역활 력타운 사업 지속 추진
	섬 지역 교통·물류 등 생활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개선 교통 사각지대 해소, 택배비 지원 등 서비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도서 지원을 위해 20개 항로 여객운항 지원, 섬 주민·여행객 교통약 자 지원시설 설치('25, 신규) 및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개선 • 원격진료 지원 의료 사각지대 섬(약 200여개) 대상 원격진료 서비 스 제공('25), 섬·어촌을 찾아가 의료, 생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 는 어촌복지서비스 시범사업 지속 추진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해안가 재해·재난 대응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 대응 해수면 상승, 침식 등에 대응하는 통합 재해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 개발시 침식·침수 영향 사전검토 의무화('25, 「연안관리법」 개정) 침수 등 상습 피해 발생 구역은 국가가 직접 완충공간으로 조성 국민 안심해안 조성사업 20개소 추진방안 발표('25.上)
해양공간의 질서있는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상풍력 입지 해상풍력 입지정보 구축, 적합입지 마련 및 어업인 의견수렴 강화 등 계획입지 도입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안 국회 계류) 해양관할구역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해양관할구역 획정법」 제정안 국회 계류) 공유수면 이용질서 확립 공유수면 이용현황 정기·수시 조사,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기간이 도과한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관리 강화

업무추진 방향

목표

국민과 상생하는 국가유산, 높아지는 국민행복

- ①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가치창출 기반 마련
- ② 촘촘하고 안전한 포괄적 보호체계 구축
- ③ 모두가 함께 누리는 국가유산 향유
- ④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한국유산의 세계화
- ⑤ 국격에 걸맞은 국가유산 분야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기대

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주요 성과

-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국가유산기본법」과 유형별 법체계로 재편('23)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토지이용관련 규제 혁신 지속('22~'24)
-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사전영향협의제도화, 복잡한 규제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가유산영향지단법 제정

보완
사항

- 국가유산 체계의 본격 시행 및 조직개편에 따라 국가유산의 유형별·전문적 관리를 강화
- 국가유산이 국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모색 필요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가치창출 기반 마련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국가유산 정책 고도화로 국가유산 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시행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5개년 계획 마련('25.12)
국가유산 산업 육성으로 미래 부가가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기본계획 수립 과학적·산업적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제2차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수립 • 법 제정 추진 「국가유산기본법」 제27조의 구체적·체계적 정책 마련 위한 「국가유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25.下)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규제 합리화를 통한 국가유산과 지역의 상생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진단제도 시행 도시계획 등이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규제 절차를 일원화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2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예정지역의 매장유산 지표조사·유존지역 협의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동시 실시하여, 영향이 없으면 허가 의제함으로써 국민 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
국가유산 보호와 조화로운 지역정비 및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 이미지 찾기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과 매력 넘치는 고도 조성 사업 지속 • 역사문화권정비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문화권정비법」에 근거하여, 2차년도 역사문화권정비 선도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권정비 선도사업(강릉, 나주, 함안, 해남)의 기본·실시설계 및 사업 착공 • 주민지원 체계 마련 사적·명승 등을 중심으로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주민주도 사업 마을해설사 양성 등 고도 주민 활동사업 및 전수교육관 프로그램 참여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

■ 촘촘하고 안전한 포괄적 보호체계 구축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문화유산 유형별 보존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등록 확대 보존가치가 높은 유산에 대한 지정·등록을 확대하고, 신규 분야 발굴을 통해 균형 있는 지정을 추진 • 수리제도 개선 근현대 부동산유산 필수보존요소 도입 및 전통건축 수리 품질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설계) 실측설계업자가 설계부터 준공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등 추진 - (직접수리)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국가유산에 대한 직접 수리 방안 마련 • 목조 건축유산 분석 부재별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역사성을 분석하고, 이력 관리체계를 구축 • 원형자료 구축 건조물 정밀실측, (불교)동산유산 정밀조사 등을 통해 기록함으로써 문화유산의 수리·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목록화 계획 수립 보존 가치가 높은 예비문화유산의 발굴 및 선정하고, 불교문화유산 일제조사(천개, 승탑·탑비 등)로 국가유산 지정·등록의 기초자료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생활, 산업, 과학 등) 목록화 5개년 계획 수립으로 10,000여건 목록 확보

주요 업무계획 국가유산청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권 자원 발굴 비지정유적 발굴을 확대하고, 문헌·설화 등을 조사·연구하여 문화권별 정체성 규명 및 활용자원 확보 • 중요유산 보수정비 세계유산, 국가지정·등록유산 등의 가치보존을 위해 연구와 고증 등을 거친 보수·복원 추진 • 궁능의 역사성 복원 4대궁, 종묘·사직단, 조선왕릉 등 궁능 문화유산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복원사업 지속 추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관리 법령 제정 문화·자연·등록유산을 포함하는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새로운 국가유산 재난안전 정책 마련 - 「문화유산법」에서 재난안전 분야를 분리하여, 기후변화대응, 재난안전환경조사, 긴급안전조치 등 조문 신설 • 재난 표준 매뉴얼 정비 국가유산 및 보호물 보호구역 재난 표준 매뉴얼 제정(‘25.1) 및 「화재 등 재난대응 가이드라인」 개정 등 위기대응 지침 마련 • 포괄적 관리기반 마련 국가지정(등록)유산 정기조사와 비지정유산 돌봄 관리대상 선정기준 마련 • 인적훼손 대응 통합 상황관리 체계 구축하고, 상시적 돌봄활동 확대, 방법 시스템 확충 등 인적훼손 대응시스템을 강화 • 방재인프라 지속 구축 화재에 취약한 목조 국가유산 대상 소방·전기 시스템 구축 및 안전경비원 배치 • 안전관리 사전조사 국가유산 보호구역 내 사면·계곡부 등 풍수해 위험 지역 실태 조사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재해위험도 평가 등 안전관리 사전연구를 실시 • 기후변화 대응 연구 국가유산 피해회복 기술개발 및 국가유산 적응관리 기술개발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 신기술 적용 확대 IoT 기술을 접목한 건축유산 상시모니터링 강화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식물·자연경관 조사에 방재드론 활용 확대

[주요 업무계획]

국가유산청

모두가 함께 누리는 국가유산 향유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국민들의 생활 속 쉽게 느낄 수 있는 국가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 체험 확대 국민들이 언제든지 국가유산을 찾아 향유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복원·콘텐츠 제작 멸실된 주요 건축물에 대한 디지털 복원(AR재현 등)을 추진하고, 실감콘텐츠 제작·보급으로 새로운 관람 및 체험서비스를 제공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한국유산의 세계화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유네스코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재 지속 추진 세계유산 신규 등재 신청 준비 및 차기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공모·선정('25.4) 등재후보 발굴 예비잠정목록 발굴 및 기존 잠정목록 재검토 등 제도개선을 통한 전략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후보군 유형 : 근대유산·기억유산(소록도, 항구도시 인천), 자연유산(울릉도) 등 영향평가 운영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평가항목·검토기준 및 세계유산지구 지정 절차 마련 보존관리 내실화 유네스코 정기보고와 「세계유산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연계하고, 지역민이 참여하는 홍보·활용 사업을 추진

건축도시 정책동향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 자료와 정책 정보 및 학술 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 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